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과 사회운동

류미경 | 정책위원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국제적인 운동의 부상

1997년 IMF 경제위기와 함께 등장한 김대중 정권은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집행자였다. 이전 정권이 체결한 IMF 합의 의향서에 담긴 금융자유화와 자본 시장 개방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리해고제 도입, 4대 부문 구조조정과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 도입, 두 단계에 걸친 외환거래 자유화 등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본격화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외자 유치만이 한국경제가 살 길”이라며 한국에 투자된 외자의 수익성 극대화 와 안전성 보장을 위한 양자간 투자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1998년 하반기부터 한미/한일 투자자유화협정(BIT) 협상을 개시했고, 뒤이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했다. 1998년 당시 이러한 BIT나 FTA의 실체는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한미 BIT와 연계된 스크린쿼터 폐지 문제로 스크린 속 영화배우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사회진보연대는 출범 직후 <투자자유화협정 및 초국적자본 대응을 위한 대책반>(이하 대책반)을 구성하여 이러한 협정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회적 영향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대책반은 스크린쿼터처럼 여론을 통해 알려진 문제뿐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이러한 협정에 담겨 있음을 파악했다. 즉 한미 투자자유화협정이 외국 기업의 고용승계의무, 현지인 일정비율 고용 의무,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각종 이행의무부과금지, 직간접적 수용시의 국가 보상 의무, 구속적인 분쟁해결절차 등을 무력화하며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해체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한일 투자자유화협정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외국기업에 대한 교육세 등 목적세 부과 폐지 등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여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추동하는 핵심적인 기제들에 대한 민중운동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대책반의 이러한 활동은 <투자협정 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이하 민중행동) 결성으로 이어진다. 1999년 6월 사회진보연대는 민주노총, 전농 등 여러 단체들과 함께 OECD 내에서 추진되고 있던 다자간투자협정(MAI) 체결과 WTO 내에서 추진되던 새로운 무역협상 라운드인 밀레니엄 라운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행동과 발맞추어 “6-18 국제민중행동, IMF-한미/한일투자협정-밀레니엄라운드 반대 행동의 날”을 개최했다. 이 공동행동의 성과로 결성된 민중행동은 1999년 11월 시애틀 3차 WTO 각료회의 저지투쟁에 대표단을 파견했다.¹⁾

시애틀에서 벌어진 국제적인 투쟁은 빈곤과 불평등을 확산하는 WTO 국제무역체계의 모순을 폭로해냈고, 밀레니엄라운드의 출범을 실질적으로 저지해냄으로써 세기의 끝자락을 뒤흔든 커다란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와 동시에 세계 민중들의 직접적인 연대로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

1) 시애틀 WTO 3차 각료회의 결렬 및 국제 연대 시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주최 워크숍 발제문을 참조할 수 있다. 이창근, 「시애틀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http://antiwto.jinbo.net/jsboard/read.php?table=kopa&no=51>)

회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전 세계 사회운동에 심어주었다. 여기에 힘입어 민중행동은 2000년 1월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으로 확대 재편되었다.²⁾ WTO 3차 각료회의는 결렬되었지만 여러 의제들에 관한 협상은 계속되면서 초민족자본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자간, 양자간 투자자유화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을 사회운동의 의제로 만들어내고 이에 대한 민중적인 대안을 형성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농 등 대중조직과 학생, 환경, 여성, 보건 의료 등 부문조직을 포함하여 40여개 단체가 국민행동 출범에 함께했다. 사회진보연대는 사무국을 구성하는 것에서부터 국민행동이 출범하고 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국민행동은 200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대응하는 투쟁을 <신자유주의반대, 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와 함께 조직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이 먼저 ASEM 내의 민간 협의체인 'ASEM 2000 민간포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국민행동과 민중대회위원회는 민간포럼을 통한 의견개진이 아니라 ASEM이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지역통합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과 투쟁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두 연대기구는 ASEM 2000 민간포럼과 대규모 집회를 공동개최하되, 별도의 교육, 선전사업 및 실천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ASEM 반대 민중행동>을 구성했다. 이 기구를 통해 교육자료집 발간, 문화제 및 국제포럼 개최, 회담장 앞 항의시위를 공동으로 진행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국제적인 투쟁

2)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은 2003년 초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한칠레 FTA 체결 이후 투자자유화 조치만을 담은 투자협정보다는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 철폐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자유무역협정이 대체를 이루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과 국내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연결시켜내고자 했다.³⁾

초민족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에 맞서 민중의 보편적 권리를 옹호하자

김영삼 정부는 재벌중심 세계화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여 이들 기구가 요구하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게 한국사회를 재편하려고 시도했다. WTO를 탄생시킨 우루과이라운드는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과 서비스도 자유 무역의 대상으로 삼아 각종 무역장벽 제거를 시도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 새로운 의제를 추가해서 초민족 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을 공격한다. 1999년 3차 각료회의에서 출범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밀레니엄라운드(우루과이라운드)에서 무역협상 의제로 포함된 농산물 및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위한 세부적인 원칙을 확정하고 투자자유화를 비롯한 새로운 의제의 협상을 시작하려는 시도였다. 시애틀에서 실패한 후 2년 뒤인 2001년 4차 각료회의를 통해 ‘도하개발의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협상이 개시되었으나, 시애틀을 계기로 한 대안 세계화운동의 성장과 WTO의 내부 모순 확대에 의해 아직까지도 교착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 한미 FTA와 같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무역자유화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려는 시도로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농산물을 무역자유화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WTO가 출범하자 국내에서는 농산물 수입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이 폭발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던 WTO

3)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정종권, 「아셈투쟁 평가, 일본전진 그러나 이보후퇴」,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0년 11월호.

내에서의 새로운 협상이나 김대중 정권이 추진한 양자간 투자자유화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을 단순히 '수입개방 반대'라는 논리로 맞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국민행동은 각종 다자간, 양자간 협정으로 인해 국내 시장이 잠식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민족자본이 국경을 넘나들며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하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전 세계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를 파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국민행동은 WTO 도하개발의제의 농업협정(AoA)이 관세감축과 각종 보조금 폐지를 통해 전 세계 농업 생산 및 무역에 대한 초민족 농기업의 지배력을 확대하며 민중의 식량주권을 파괴한다는 점, 서비스협정(GATS)이 교육, 의료, 물, 에너지에 대한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를 파괴하며 초민족 금융자본의 활동범위를 넓힌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제약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며 민중의 의약품접근권을 파괴하는 한편 중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 지식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파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노동기본권을 직접 공격하는 내용(노동쟁의 억제, 무노동무임금 관철, 퇴직금 유연화, 불법노동쟁의 신속조치 등)을 '비관세장벽 제거'라는 명목으로 담고 있는 한일 FTA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양자간 협정은 WTO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국민행동은 여러 가지 무역협정에 맞서는 투쟁이 국익보호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으로서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연대투쟁을 중요한 전술로 사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전개된 투쟁이 국민행동이 제기한 위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만 조직된 것은 아니었다. 양자간 FTA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각 협정의 체결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피해를 축소하기 위한 대응이 형성되었다. 한미 FTA 반대투쟁은 스크린쿼터를 지

키기 위한 영화인들의 투쟁, 한칠레 FTA는 농산물 수입개방을 저지하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 한일 FTA는 자동차 부문 노동자들의 투쟁과 같은 형태로 각각의 협정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된 것이다. 이러한 투쟁들은 전체 사회운동의 공동투쟁으로 확산되지 못한 채 피해 당사자들의 방어투쟁에 그쳤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투쟁은 부문을 넘나드는 사회운동의 연대를 촉발하기보다는 국내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장을 지키고 개방의 속도와 일정을 조절하기 위해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FTA를 신중하게 체결하고자 주장했던 자본의 요구에 묻혀버리곤 했다.⁴⁾

한국 사회운동과 국제 연대

1998년 다자간투자협정(MAI) 저지투쟁, 1999년 시애틀 WTO 3차 각료회의의 저지투쟁 참여를 발판으로 결성된 국민행동은 전 세계 민중의 보편적 권리 옹호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연대를 중요한 전술로 사고하고 실행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FTA 체결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민행동은 일본의 '이의 있음! 한일투자협정 긴급캠페인'과 함께 서울과 도쿄에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공동 대응의 태세를 갖췄다. 양국 정부가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공동 성명서를 작성하고 각 국에서 항의행동을 전개했다. 2004년 11월 도쿄에서 6차 협상이 열렸을 당시에는 사회진보연대를 비롯하여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국민행동에 소속된 여러 단체들이 '한일 FTA 저지 동경 원정투쟁단'을 구성하여 도쿄 현지에서 투쟁을 벌였다. 일본에서는 전노협, 평화포럼, 아탁 저팬 등이 '11월 일한 FTA 저지 공동행동 실행위원회'를 구성

4) FTA 반대투쟁 평가의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류미경, 「대안세계화운동과 한미 FTA 반대투쟁」, 『한미 FTA, 이미 실패한 미래』, 도서출판 사회운동.

하여 투쟁에 함께했다. 양국 민중은 한일 FTA가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선사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가 되어 투쟁했다.⁵⁾

2003년 WTO 5차 각료회의 당시에도 국민행동은 전국민중연대와 함께 투쟁단을 구성하여 멕시코 칸쿤으로 떠났다. 그 해 1월 3차 세계사회포럼에 모인 각국의 사회운동들은 칸쿤 5차 각료회의 저지 투쟁을 중요한 공동행동으로 정했다. 칸쿤에서 한국 투쟁단은 특유의 창의력과 기동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당시 이경해 열사의 죽음은 현지의 모든 이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전 세계 농민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WTO가 농민을 죽인다”는 그의 외침은 여전히도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 한국 투쟁단은 칸쿤 시내 한 복판에서 천막농성을 전개하면서 회담장 밖에서의 투쟁을 이끄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시애틀에 이어 칸쿤에서도 WTO 각료회의는 결렬되었다.⁶⁾

칸쿤과 도쿄에서의 투쟁은 홍콩으로 이어졌다. 2005년 12월 홍콩에서 열린 6차 각료회의 저지투쟁에서는 한국의 농민들을 비롯한 아시아 사회운동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시애틀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1년부터 시작된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를 계기로 아시아 사회운동들이 활발한 교류와 연대활동을 펼친 결과였다. 아시아 사회운동들은 여러 차례 ‘아시아 사회운동 총회’를 개최하여 각국 민중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5)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류미경, 「한일 FTA 6차 협상 저지 동경 원정투쟁 3일간의 이야기」,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5년 1-2월호.

6)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두 글을 참조하시오. 류미경, 「WTO 5차 각료회의 무산, 어떻게 볼 것인가?」, 『월간 사회진보연대』(2003년 11월호); 「한국민중칸쿤투쟁단 평가 보고대회 자료집」(<http://antiwto.jinbo.net/jsboard/read.php?table=kopa&no=578>)

를 서로 공유했고, 각 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자유무역협정이 민중들에게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 함께 분석했다. 국민행동은 총회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004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장관 회의에 맞서 조직된 아시아 민중/사회운동 회의와 2005년 부산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정상회의에 대한 대응으로 개최된 'APEC 반대 국제민중회의'는 WTO 홍콩 6차 각료회의에 맞서는 투쟁에서 아시아 사회운동들이 앞장설 것을 결의하는 장이 되었다. WTO 각료회의 저지 투쟁에 참석하기 위해 홍콩에 모인 이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한국 투쟁단은 회담장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세계 민중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술을 선도적으로 구사했다. 한국 투쟁단의 선도적인 투쟁으로 하룻밤에 천명 이상이 연행되고 그 중 13명이 기소되어 3개월이 넘도록 재판을 받았다. 이는 홍콩 현지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홍콩투쟁 직전 노무현 정부의 폭력 진압으로 사망한 전용철 농민열사에게서부터 초민족 농기업의 횡포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자살을 택하는 인도의 농민들, 제약자본이 내세우는 특허권으로 인해 값싼 약을 먹을 수 없는 민중들에 이르는 세계 민중들의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홍콩에 모인 이들을 최루탄과 방패로 막아선 홍콩 정부와 경찰의 행태는 WTO가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임을 충분히 드러냈다.⁷⁾

한미 FTA 반대투쟁: 국익인가 노동자 민중의 권리인가

2006년 6월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 협상은 전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가 '개방

7) WTO 6차 각료회의에 대한 한국민중투쟁단의 입장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한국민중홍콩투쟁단 투쟁해설서』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id=856&page>)

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성장 전략이라며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노무현 정부가 한국사회의 미래를 둘러싼 중대한 사안을 두고 민중들은 아무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철저히 배제하면서 초민족자본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좇자 민중들의 불만은 높아져갔다. 2006년 초 국민행동은 그동안 선도적으로 제기해 온 의제들이 다양한 대중조직으로 확산되었다고 판단하여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은 민주노총, 전농 등의 대중조직들이 한국진보연대를 건설하여 연대사업을 한국진보연대로 집중할 것을 염두에 두고 국민행동 운영에 힘을 쏟지 않았던 상황 탓이기도 하다. 국민행동 해소와 함께 참가단체들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를 건설하는데 참여한다. 범국본에는 300여개의 단체들이 참여했으며, 산하에 15개의 부문별 공대위가 구성되었다. 한미 FTA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특정 부문의 피해에 관한 문제를 초과하여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그리고 한국 사회의 미래에 관한 문제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한미 FTA 협상 개시와 함께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었던 FTA 반대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에 관한 범국본 참가단체들의 입장은 통일적이지 않았다. 가장 부각된 쟁점은 한미 FTA가 끼칠 피해의 정도였다. 이런 차원에서 농축수산업과 서비스 분야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보호조치를 답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한미 FTA 협상이 추진되어 온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최대한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FTA 체결 절차에 관한 대통령 훈령에 명시된 공청회조차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통상협정 체결 절차에 관한 법’ 제정을 범국본의 주요 요구로 삼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사회진보연대는 범국본에 참가하여 한미 FTA 반대투쟁이 피해산업 보호나 협정 체결절차에 대한 문제제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권리를 담보로 한 재벌중심의 세계화에 맞서는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또한 노동자운동, 농민운동이 한미 FTA 반대투쟁을 계기로 국제적인 대안세계화운동과 함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는 전혀 다른 민중의 대안을 형성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FTA 체결이 불러올 경제적 손익을 예측하는 것을 넘는 근본적인 비판이 필요했는데, 단행본 『한미 FTA, 이미 실패한 미래』(2006. 도서출판 사회운동)를 발간하는 한편 여러 매체를 통해 한미 FTA를 계급적 관점에서 비판하고자 했다. FTA의 목표는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고, 이는 노동자 민중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국내 재벌과 초민족자본의 생존전략일 따름이며, 오히려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 대가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범국본은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가며 양국 정부가 협상을 진행할 때마다 대규모 집회와 원정투쟁을 벌였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 반대’를 내건 모든 집회를 불허했지만 세 차례나 민중총궐기를 성사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는 2007년 4월 협상을 타결했다. 그 후 운동진영 일각에서는 ‘협상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어느 편의 요구가 더 많이 관철되었나’, ‘한미 FTA가 발효되면 어느 편이 더 많은 이익을 거둘 것인가’를 따져볼 때 미국의 일방적인 이익이 예상되므로 한미 FTA의 경제적 실익은 없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를 분리하여 ‘한미 FTA의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신자유주의 지배세력 내 일부와 제휴하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요구

를 다 들어주더라도 협상을 타결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 이익이다'라고 주장하며 한미 FTA 반대 운동을 '후퇴세력'으로 몰아세웠다. 2007년 6월 금속노조의 '한미 FTA 저지 총파업'은 이러한 정부의 이데올로기 공세로 주춤하게 된 한미 FTA 반대운동을 다시금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였으나 이를 끝으로 FTA에 대한 전 사회적인 관심과 대응은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명박 정권의 등장과 촛불집회

이렇듯 협상 초기 형성되었던 한미 FTA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여론은 분야별 이해득실, 국익 논란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체결 후에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이명박 정부가 2008년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한 후, 이른바 '촛불 국면'이 개시된다. 한국진보연대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몇몇 시민단체의 발의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개에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결성되고 180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한미 FTA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미국은 한미 FTA 협상 개시의 선결조건으로 쇠고기 수입 재개를 제시했고, 노무현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2006년 9월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고기에 한하여 수입을 재개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정부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직후에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하면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 약속을 이어받아 한미 FTA가 양국 의회에서 조속히 비준되도록 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생태와 민중의 건강에 대한 위협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자유화'라는 미명하에 이를 누구도 통제할 수 없도록 만들

어버리는 현재의 국제 무역체계의 본질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쇠고기 수입 재개의 발단이자 이를 매듭짓도록 추동했던 한미 FTA는 촛불의 의제에 포함되지 못했다. 물론 범국민 역시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고 난 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전면에 내세워 한미 FTA 반대 여론을 재형성하려고 시도했다. 당시 사회진보연대는 재벌중심의 세계화 비판과 대안 세계화 운동의 관점에서 발전되어야 할 한미 FTA 반대운동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라는 단일 이슈 운동으로 환원할 우려가 있는 이와 같은 전술을 경계했다. 또한 광우병의 위험을 강조하는 방식 역시 사태에 대한 과학적 인식보다는 선정성에 기대어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광우병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에 비판적이었다.

그러던 중 2008년 5월부터 대중적인 투쟁이 전개되고 쇠고기 수입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문제제기로 확대되었다. 사회진보연대는 대책회의가 결성되고 난 후에는 한미 쇠고기 협상이 WTO나 FTA를 통해 추진되는 신자유주의적 투자와 무역 자유화의 일단이며, 이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은 신자유주의 반대/대안세계화 운동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운동진영 내에서 확산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였다.⁸⁾

자본의 위기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연대로

2008년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한미 FTA 국회비준 문제가 다시 이슈로 떠올랐지만 사회운동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참가단체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 그리고 대책회의에 참가했던 네티즌 단

8) 자세한 내용은 다음 소책자를 참조하십시오. 사회진보연대, 『광우병, 한미FTA, 민중의 식량주권』,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id=1584&page=1>)

체 등은 민생민주 국민회의(준)을 결성하여 폭넓은 ‘반이명박 전선’을 구축하
 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국민회의 결성 과정에서 민주당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
 부가 논란이 되었는데, 민주당이 직접 참가하지는 않지만 민주노동당이 민주
 당과 공조하고 여기에 시민사회 세력이 가세하는 식의 행보는 계속 되고 있
 다. 한미 FTA를 미국발 금융위기의 확산과 연관해서 다시금 이슈화하면서 범
 국본을 재기동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큰 힘을 얻지 못하고 있
 다. 많은 단체들은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 미국 내 비준 진척 상황
 에 따라 천천히 비준하자고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이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지
 연시켜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WTO와 각종 FTA를 통해 초민족자본
 의 이해가 배타적으로 관철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완성하려는 시도에 대
 해 국민행동을 결성하여 그 실체를 선도적으로 폭로하고 운동의 의제로 만들
 려던 노력, 그리고 전국민중연대와 함께 민중운동 진영 내에서의 공동투쟁을
 형성하려는 노력, 나아가 국제적인 민중들의 단결과 연대를 꾀하려던 노력의
 성과가 소실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또다시 ‘한미 FTA 국회비준 지연’이라
 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한다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기회는 한 없이 미뤄지
 고 말 것이다. 올해 초부터 세계 곳곳에서 경험한 식량위기, 에너지 위기, 그리
 고 그 영향과 범위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는 지배세력이 한미
 FTA를 통해 완성하려던 금융화된 세계경제로의 편입,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적 재편의 과국적 결과를 모두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이에 대한 민중적인 대안
 을 형성하기 위한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연대 강화, 민중운동 공동 투쟁의 복
 원이라는 과제를 방기하고 말 것인가? 정세는 우리에게 엄중하게 묻고 있다.